

## 공익요원 中企 우선 배치

정부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정책자금을 장기 시설, 창업, 수출 자금 위주로 2조4000억원 공급하며 수출금융 등은 순수 신용대출 위주로 운용하는 등 신용대출 규모를 3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기업 1200개사를 지정,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월마트 등 해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아프리카 등에 6개월간 700명을 파견해 수출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 상암동에 중기센터 건립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최근 "서울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DMC 인근 부지 2만7500평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 환경심의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매가 성사되면 하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이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전시공간인 전시·컨벤션센터와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센터 등 2개의 건물을 20층 정도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조합간 공동수익사업을 보급시키고 개성공단 조기입주 지원, 삼성과의 정보화 협력사업, PL보험사업 등을 통해 기협중앙회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생산직 근로자 임금 4.1% 증가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과 임금현황

이 지난해 대비 3.9%와 4.1%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체 1천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제조업임금실태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직종별 임금과 임금이 각각 3만3352원과 133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직종의 평균임금은 전기기사가 60,99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기사(56,789원), 회로설계사(53,903원), 기계설계사(53,274원) 순으로 나타났고 하위 10개 직종은 하침공(24,901원), 연사공(26,856원), 상침공(27,037원) 등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급여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28만3천원보다 4.1% 상승한 133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급여 비중은 기본급이 71.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통상적 수당과 기타수당이 13.3%, 초과근로수당이 15.3%로 나타났다.

## 단체수의계약 10개 품목 제외

중소기업청은 2004년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작년보다 10개 품목이 적은 총 138개 품목(84개 조합)으로 지정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우산 등 12개 품목을 제외한 대신 스테인리스 물탱크, 경관 조명기구 등 2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된 품목은 경인쇄물, 우산, 판유리가공품, 스코아판, 북공판, 여과기, 혼합조미료, 우물공사 및 관정공사, 휘장, 식용유지, 졸업사진앨범, 기념품 등이다. 중기청은 당초 공정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03년 지정물품 중 30여개를 제외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中企 정책자금 2조4천억원

올해 중소기업에 2조4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각 금융기관장, 중소기업지원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위원회에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2조

3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특징은 구조개선,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폐합한 점이다. 지원대상은 IT, BT 등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최근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초과기업을 지원제한 대상으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동종업계 가중평균 부채비율의 2배 초과 기업으로 변경했다.

또 구조개선자금(1조2천억원)의 지원한도를 지난해보다 10억원 늘리고 설비자동 운전자금 비율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증가한 40%로 확대해 설비투자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1200억원)은 전액 신용으로 모기업의 파업피해 및 재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방지 및 복구 지원예산으로 운영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기업의 신용심사·평가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신용으로 공급키로 하고 밝혔다.

## 무기장 사업자 세금 부담 크게 늘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추계신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이후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소득상한배율이 현행 1.2배에서 대폭 인상된다.

소득상한배율이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과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 적은 수치를 택해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득상한배율이 늘어날 경우 산출되는 소득도 늘어나 사업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장부를 기재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세청은 권고했다.

## 중세에 디자이너 파견 · 인건비 지원

2008년 세계 7위의 디자인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지방의 디자인역량 강화에 각종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디자인산업 육성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국제화 △지방화 및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의 목표는 디자인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디자인 부가가치를 7조원에서 2008년 20조원으로 높이고 현재 하나뿐인 세계 100위권 디자인·브랜드 기업을 5~6개로 늘려 우리나라를 세계 7위의 디자인선진국에 진입토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1.9%(200억원)에 불과한 디자인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2007년 5.6%(1천억원)로 끌어올려 디자인 기초기반 및 선도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산자부는 디자인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관세 월별 일괄납부 허용

앞으로는 관세를 수입 신고할 때마다 건별로 내지 않고 한 달치를 모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관세를 한 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관세 체납이나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고 담보 제공 능력이 있는 업체는 수입신고 건마다 내지 않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고 관세를 낸 뒤 3개월 내에 부족액을 스스로 정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해도 5%의 가산세가 붙고 이후에는 10%까지 물어야 했다.

이와 함께 납부세액을 자율 심사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 스스로 납세 내역을 심사한 뒤 세관에 결과를 통지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세관의 직접 심사가 생략된다. 화물 적체

가 심한 공항과 항만의 보세구역은 화물을 쌓아둘 수 있는 장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재경부 장관에게서 관세청장으로 이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항과 항만 하역 터미널에 수입 신고를 마치고도 15일이 넘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물품이 17%에 달하는 데도 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면세점과 보세창고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한 뒤 나중에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종전에는 해당 세관장이 맡았으나 앞으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 소규모 공공정보화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앞으로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사업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기업 그리고 기업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기업 사업참여 제한을 위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두안에 따르면 삼성SDS, LG CNS, SK C&C 등 연간 매출액이 8천억원을 넘는 업체들은 10억원 또는 20억원 이하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단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도 제외된다. 또 시범사업이나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사업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프트웨어 사업 분쟁조정위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분쟁을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S/W사업 계약의 내용, 설계변경, S/W개발완료 후 납기검수, 하

자보수 등 주로 발주자와 수주자간 분쟁을 처리하게 된다.

## 한국기업 중국투자 성공률 기대이하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중 절반 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지만 진출 후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KOTRA는 국내 기업들의 중국투자를 돕기 위해 최근 펴낸 '중국투자 실무 가이드'에서 "우리 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중 45.6%는 중국에 몰려 있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현지 진출 후 경영환경이나 투자정보 부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KOTRA는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가운데 4분의 3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성공사례는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자본, 기술 등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현지 경영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회사가 급증하고 회사의 분리, 통합, 재편성이 잦은 중국에서는 유령회사에 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업체의 실존 여부와 법인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KOTRA는 설명했다.

## 중고설비거래사이트 인기

중고 설비 거래 사이트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유휴설비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휴설비정보 포털사이트(www.findmachine.or.kr)에 한해동안 총 6474건의 중고설비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거래가 성사된 것은 총 622건, 17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매물건수는 사이트 개설당시 802건, 지난해 1/4분기 1183건, 2/4분기 1518건, 3/4분기 1233건, 4/4분기 1783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건수도 1/4분기에는 70건에 불과했지만 2/4분기 113건, 3/4분기 246건, 4/4분기 193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고설비 매매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